

1. 국제동향

- Ⅰ 1974~2008년 신자유주의 확산, 노동시장 유연화
- Ⅰ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재검토 활발.
 - Ⅱ 수출/부채 주도 성장모델 → 내수/근로소득 주도 성장모델
 - Ⅱ 이윤(profit) 주도 성장모델 → 임금(wage) 주도 성장모델
- Ⅰ But 아직 뚜렷한 반전의 주체와 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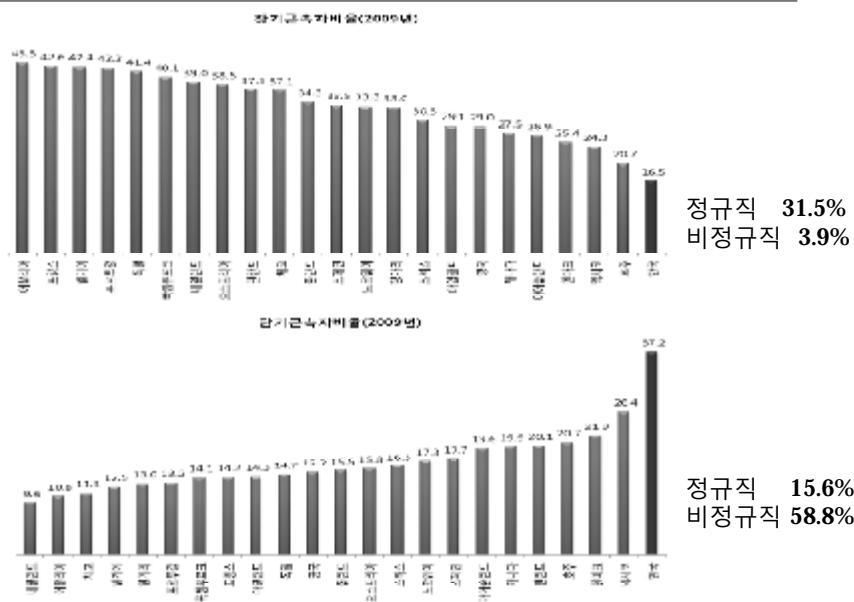
2. 국내동향

- Ⅰ 1994~2011년 신자유주의 확산, 노동시장 유연화
 - ⇒ 노동시장 양극화 [고용 불안정 • 소득 불평등] 확대
- Ⅰ 2012년 총선·대선에서 경제민주화(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등)와 복지국가가 hot issue로 떠오름.
 - Ⅱ 정작 그 뿌리인 '노동시장/노사관계 개혁'은 hot issue로 떠오르지 못 함.
- Ⅰ 2012년 총선과 대선 공약에서는 여야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 용어 사라짐.
 - Ⅱ 여야 모두 과거보다 전향적 일자리 공약 제시. 그러나 노동(노사관계) 공약 취약.

Ⅱ.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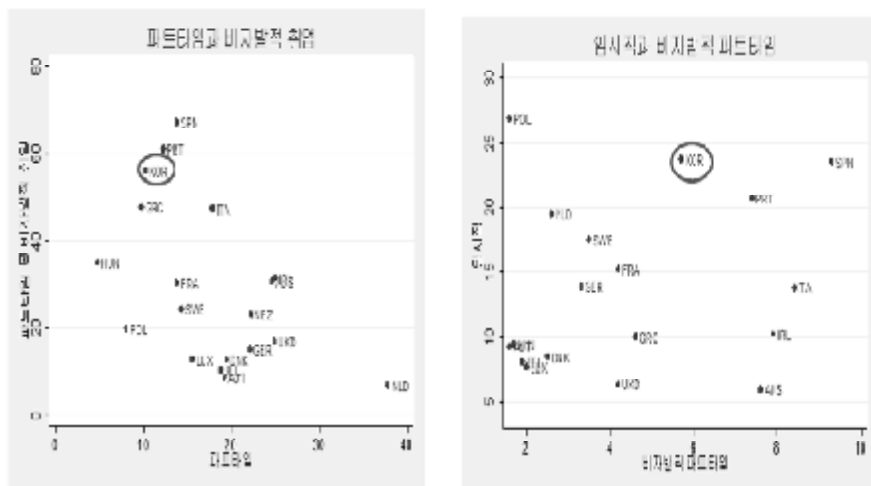
1. 고용 불안정

1) 한국은 초단기 근속의 나라



2) 직접고용 비정규직 - 임시직과 비자발적 파트타임

임시직과 비자발적 파트타임 국제비교(2012년) : 한국, 스페인 가장 많음.



시간제 근로자 임금

	월평균임금(만원,%)			시간당임금(원,%)		
	정규직	시간제	시간제/정규직	정규직	시간제	시간제/정규직
2001.8	169	45	26.7	8,139	6,497	79.8
2002.8	182	50	27.4	8,810	6,921	78.6
2003.8	201	50	24.8	9,878	6,862	69.5
2004.8	211	54	25.6	10,552	6,954	65.9
2005.8	220	52	23.7	11,203	7,036	62.8
2006.8	226	55	24.3	11,653	7,005	60.1
2007.8	239	56	23.4	12,452	6,802	54.6
2008.8	250	57	23.0	13,238	7,138	53.9
2009.8	255	54	21.0	13,730	6,533	47.6
2010.8	266	56	21.2	14,401	6,758	46.9
2011.8	272	60	22.2	14,831	7,578	51.1
2012.8	277	61	21.9	15,286	7,117	46.6

- 월평균임금 : 2001년 45만원(정규직의 26.7%) → 2012년 61만원(21.9%)
- 시간당임금 : 2001년 6,497원(정규직의 79.8%) → 2012년 7,117원(46.6%)

3) 간접고용 비정규직 - 파견, 용역, 호출근로; 사내하청

- I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
 - I 노동자 1,773만 명 중 간접고용 10.0%(파견 1.2% 용역 3.8% 호출 4.9%)
 - I 사내하청은 파악 안 됨.
- I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현황(2010년 8월)
 - I 300인 이상 사업체 1,939개 중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체는 799개(41.2%)
 - I 300인 이상 사업체 직접고용 근로자 183만 명, 사내하도급 근로자 33만 명
 - I 사내하도급 비율 15.1% = 33 / (183+3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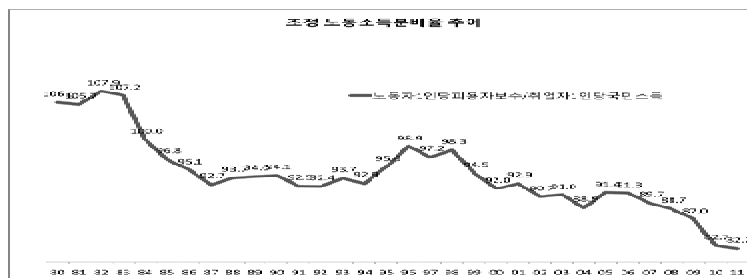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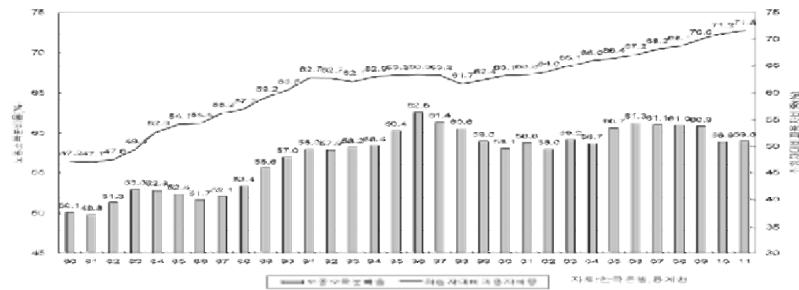
2. 소득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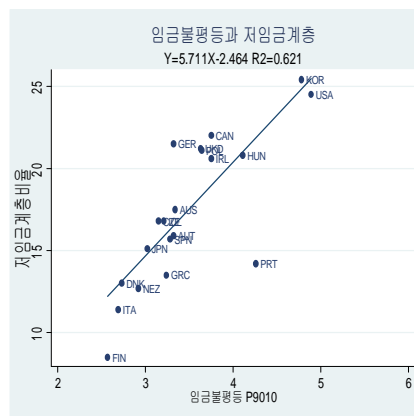
1) 성장(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연도	경제 성장률 (실질GDP)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 률+물가 상승률	실질임금(만원, 2010=100)			실질임금 인상률(%)		
				노동부 5인 이상 상용직		한국은행 피용자	노동부 5인 이상 상용직		한국은행 피용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인당보수	임금총액	정액급여	인당보수
2001	4.0	4.1	8.1	230	165	228	0.9	2.2	3.2
2002	7.2	2.8	10.0	249	180	235	8.2	9.0	3.0
2003	2.8	3.5	6.3	263	189	244	5.5	5.1	3.8
2004	4.6	3.6	8.2	269	195	247	2.3	3.1	1.1
2005	4.0	2.8	6.8	279	204	253	3.7	4.5	2.4
2006	5.2	2.2	7.4	289	213	256	3.4	4.4	1.2
2007	5.1	2.5	7.6	297	221	260	2.9	3.7	1.5
2008	2.3	4.7	7.0	296	218	258	-0.2	-1.3	-0.5
2009	0.3	2.8	3.1	295	220	257	-0.6	1.2	-0.4
2010	6.3	3.0	9.3	305	223	258	3.4	1.4	0.3
2011	3.6	4.0	7.6	290	225	257	-4.7	0.8	-0.2
2012	2.0	2.2	4.2	299	232	258	3.0	3.2	0.1
2001-12	4.0	3.2	7.2	280	207	251	2.3	3.1	1.3
참여정부	4.3	2.9	7.3	279	204	252	3.6	4.1	2.0
MB정부	2.9	3.3	6.2	297	224	258	0.2	1.1	-0.1

연평균 경제성장률 4.0%, 실질임금인상률 노동자1.3%, 정규직 2.3%

2)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5) ILO(2012), Global Wage Report 2012-13

- | 노동소득 분배율
1%p 하락 | 소비
(C/Y) | 투자
(I/Y) | 순수출
(NX/Y) | 민간수요
(C+I+NX)/Y | 총수요(승수
효과 포함) |
|--------------------|-------------|-------------|---------------|--------------------|------------------|
| 한국 | -0.422 | 0.000 | 0.359 | -0.063 | -0.115 |
| 세계 | | | | | -0.8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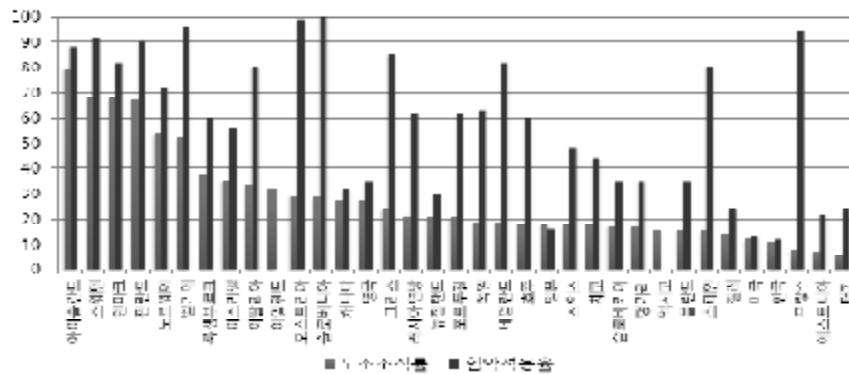
- |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인상 / 교섭력 균형 회복 / 최저임금
 | 금융규제
 | 세제/사회보장

3. 노사관계 파편화

1) 노조 조직률 / 협약적용률 10%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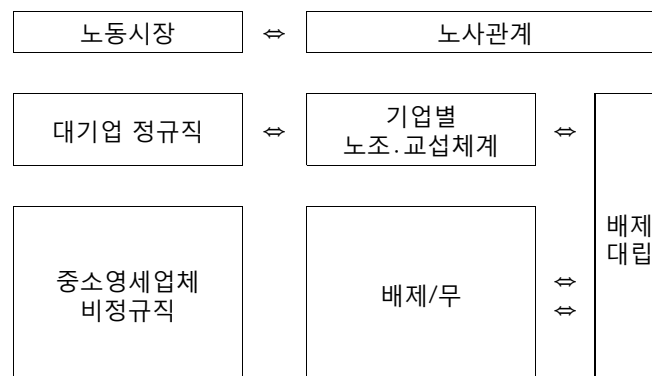
- World Bank(2002), OECD(2004), ILO(2004) 실증분석 결과
- 노조 조직률이 높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 임금교섭 집중도(centralization) 높고 조정도(coordination) 높을수록,
 - 임금불평등 낮음.

노조 조직률과 협약 적용률(2008년, %)



2) 현행 노사관계 시스템 : 극도로 분권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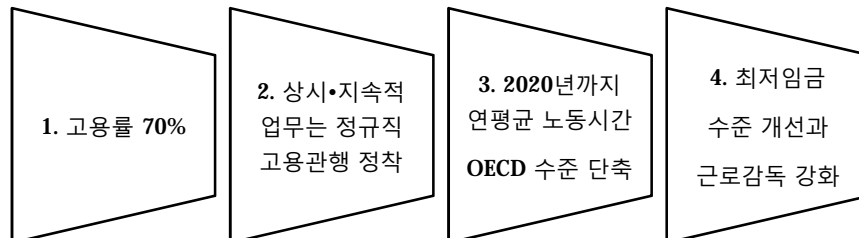
<그림>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불일치



-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통계청 조사>
- 사업체 : 205만 명(11.5%, 경찰 2012년), 256만 명(14.5%, 사업체조사 2010)
 - 기업체 : 625만 명(42.8%,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2011년)
= 정부 166만 명(11.4%) + 민간 대기업 459만 명(31.4%)

Ⅲ. 대안 : 정책적 실현방안

가. 일자리 정책 : 공약 이행



나. 노동인권 보호 : '법과 원칙', 법대로

다.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 : 중앙-산업/지역-기업 교섭·협약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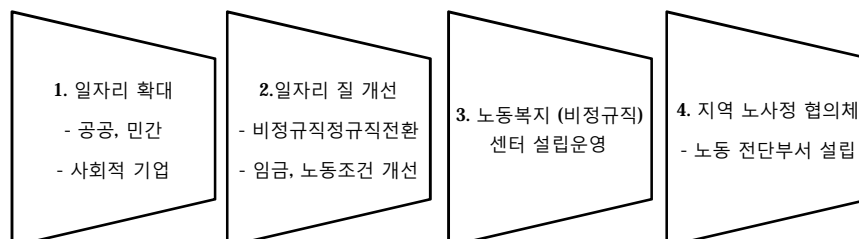
이윤-수출 주도 성장 전략 ⇒ 임금-내수 주도 성장전략

Ⅳ. 지방자치단체

가. 지난 4년 공과 평가(노동·일자리 분야)

1) 지역별 주요 노동지표 비교분석(2009~13년)

2) 지자체별 주요 사업 평가 (2009~13년)



다. 앞으로 4년(2014~18년) 공약